KWDI 해외통신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26년 10월 (2026.10.1.~10.3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스페인 Spain

○ 스페인 정부, 대리적 폭력 법제화 추진

곽서희 | 레이든 대학교(Leiden University) 정치학과 강사(Lecturer)

스페인 정부는 2026년 7월 국무회의에서 대리적 폭력(vicarious violence)에 관한 조직법안(proyecto de ley orgánica)을 승인하고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리적 폭력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 등 피해자가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이용해 고통을 가하는 폭력을 의미한다.

이번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대리적 폭력을 과거 또는 현재의 배우자나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이 제3자를 매개로 여성에게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명시했다는 점이다. 즉 스페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타인을 이용해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까지 여성에 대한 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 아울러 대리적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범위도 확대했다. 여기에는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양육이나 기타 법적 지원 대상인 미성년자와 장애가 있는 성인, 그 밖의 미성년 친족이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 피해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현재의 배우자나 친밀한 관계의 상대방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젠더폭력 관련 기본법, 형법, 민법, 아동보호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 총 10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법 측면에서는 대리적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대리적 폭력을 형법상 젠더에 따른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한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메시지, 문자, 이미지 또는 기타 콘텐츠를 공개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부가형을 도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La Moncloa (2026.7.14.), "El Gobierno aprueba el proyecto de ley contra la violencia vicarial," https://www.lamoncloa.gob.es/consejodeministros/resumenes/paginas/2026/140726-rueda-prensa-ministros.aspx (접속일: 2026.10.14.)
- Ministerio De Igualdad (2026.7.14.), "El Consejo de Ministros y Ministras aprueba el Proyecto de Ley Orgánica de medidas en materia de violencia vicarial," https://www.igualdad.gob.es/comunicacion/sala-de-prensa/el-consejo-de-ministros-y-ministras-aprueba-el-proyecto-de-ley-organica-de-medidas-en-materia-de-violencia-vicaria/ (접속일: 2026.10.14.)

- 또한 본 법안은 자녀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정 중대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친권을 자동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도 상당한 제한을 두도록 했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대리적 폭력과 관련한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폭력 행위에 대한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부모가 특정 범죄와 관련한 법적 절차의 대상이 된 경우에도 친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양육의 경우에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공동양육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양육권 결정 과정에서는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되,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 개인적 상황에 맞춰 청취 방식과 절차를 조정하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법안은 가정폭력 문제를 친밀한 관계나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한정하지 않고, 폭력이 자녀의 양육과 부모의 권리, 아동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고려하려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즉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피해 범위를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자녀와 가족 구성원, 그 밖의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의 법적 보호에 관한 법률과 민사소송법도 개정해 미성년자의 대리적 폭력 노출을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에 포함하도록 했다.

- 법안에는 민사등록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대리적 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어머니는 사망한 자녀의 성(姓)을 변경할 수 있으며, 다른 미성년 공동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성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반사회보장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고의적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와 관련된 유족급여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 아나 레돈도(Ana Redondo) 스페인 양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안이 스페인이 젠더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 규범과 논의를 다시 한번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돈도 장관은 이번 법안이 '대리적 폭력은 젠더기반 폭력의 한 형태'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에는 인식 개선과 정보 제공, 관련 정책의 모니터링을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강화해 법조인 선발 및 승진 시험에 대리적 폭력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전문교육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담았다.

- 이번에 스페인 정부가 승인한 법안은 향후 의회의 심의와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논의와 최종 입법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 법안은 스페인이 젠더기반 폭력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자녀와 가족 구성원 등을 매개로 고통을 가하는 대리적 폭력까지 법적 보호의 범위에 포함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대리적 폭력을 단순히 폭력 피해의 문제로만 다루지 않고, 친권과 양육권, 면접교섭권 등 가족관계와 관련된 문제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려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영국 United Kingdom

○ 여성 연구자의 경력 발전을 위한 「여성 연구자 헌장」 발표

이지원 |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원(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영국 기업·혁신·과학·무역부(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Science and Trade)는 2026년 7월 1일 연구 시스템 전반에서 여성 연구자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고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자발적 이행 약속인 '여성 연구자 헌장(Women in Research Charter)'을 발표했다. 헌장은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두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대학 등에도 적용된다. 헌장의 도입 배경에는 여성의 교육 및 연구 분야 진출이 확대되었음에도 경력 단계가 높아질수록 여성의 대표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영국 고등교육통계청(Higher Education Statistics Agency) 자료에 따르면, 여성은 초기·중간 경력 연구자의 51%를 차지하지만, 고위 학술직 리더십에서는 44%, 교수직에서는 31%에 그친다.

- 여성 연구자의 경력 발전 격차는 약 35세부터 두드러지며, 이는 돌봄 책임이 증가하고 시간제 근무가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린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격차를 개인의 역량이나 의지 부족이 아닌, 연구 경력의 유지와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의 문제로 진단한다. 또한 이를 성평등의 문제이자 국가의 연구·혁신 역량과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구개발(R&D) 집약 산업에서 숙련 인력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 인재가 연구 분야에 진입하고 경력을 유지하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구 시스템 자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헌장은 돌봄 지원, 유연근무, 성과 평가, 조직문화 등 연구 경력 전반에 걸친 구조적 장벽을 완화하고, 여성 연구자가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헌장은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추구할 목표를 여섯 가지 주제로 제시한다. 기관별 규모와 역할, 재원 구조, 기존 정책 수준의 차이를 고려하면서도 공통의 이행 기준과 구체적인 실천 약속을 통해 연구 시스템 전반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

① 부모와 보호자를 위한 지원 강화

- 학술 경력이 중단 없는 전일제 연구 활동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구조는 돌봄 책임이 큰 연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헌장은 박사과정 연구자를 위한 가족휴가 제도를 강화하고, 휴가 이후 연구 복귀를 지원하며, 돌봄 관련 지원 제도와 정책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특히 연구비 지원기관에는 영국 연구혁신기구(UK Research and Innovation, UKRI)의 지원 수준에 상응하거나 이를 웃도는 가족휴가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② 일관된 데이터 구축과 투명성 강화

- 연구 시스템 전반에 성별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지만, 수집 기준과 공개 방식이 일관되지 않아 기관 간 비교와 성과 평가에 한계가 있다. 헌장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성별 연구비 신청·선정 현황과 연구 수행기관의 연구 인력 현황, 채용·승진 관련 데이터를 공통 기준에 따라 매년 공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성별 격차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 GOV UK (Updated: 2026.9.29., Published: 2026.7.1.), "Women in Research Charter",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women-in-research-charter (접속일: 2026.10.19.)
- HESA (2026.8.20.), "Who's working in HE?", https://www.hesa.ac.uk/data-and-analysis/staff/working-in-he (접속일: 2026.10.19.)
- 노영희 외(2022), 「학술 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업적평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4), 93-114.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4.093 (접속일: 2026.10.19.)

③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

- 장시간 근무, 경직된 근무 일정, 연구비 집행 기한 등은 유연근무와 시간제 근무를 어렵게 하고, 돌봄 책임이 큰 연구자의 경력 발전을 제약할 수 있다. 헌장은 유연근무가 형식적인 허용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와 연구비 운영 과정에 반영되도록 하며, 유연근무나 시간제 근무를 이유로 연구자의 경력 발전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남성을 포함한 모든 연구자에게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돌봄 책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로 제시한다.

④ 연구비 지원 및 채용·평가 과정의 편견 해소

- 출판 실적의 양, 중단 없는 경력, 국제적 이동성 등을 연구자의 우수성을 판단하는 대리 지표로 활용할 경우, 경력 공백이 있거나 비전형적인 경력 경로를 거친 연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헌장은 연구자 개인의 경력 경로와 연구 활동의 맥락을 고려해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비 선정과 채용·승진 과정에서 편견이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⑤ 괴롭힘·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포용적 조직문화 조성

- 괴롭힘과 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고 내용의 기밀 유지와 후속 조치에 대한 우려, 개인적·직업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은 신고를 어렵게 할 수 있다. 헌장은 신뢰할 수 있고 접근성이 높은 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연구자의 필요에 따른 합리적 조정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존중받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⑥ 연구 분야 전반의 모범 사례 공유 및 실행

- 여성 연구자의 경력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과 실천은 기관과 연구 분야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효과적인 접근법이 충분히 공유·확산되지 못할 수 있다. 헌장은 정부와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 수행기관이 기존 사업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발굴·평가·공유하고, 연례 이행 보고를 통해 실천 경험과 학습 성과를 확산하도록 한다.

2026년 9월 29일 기준 75개 기관이 헌장에 서명했다. 헌장은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 수행기관에 공통의 이행 기준을 제시하고, 연례 보고를 통해 이행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 시스템 전반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에 준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성별 연구비 신청·선정 현황과 연구 인력의 채용·승진 관련 지표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연구자의 경력 발전 격차를 개별 기관의 문제가 아닌 연구 시스템 전반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 다만 헌장은 자발적 이행 약속인 만큼, 참여 기관의 수나 보고서 발간 여부만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공개 데이터와 이행 보고를 바탕으로 여성 연구자의 채용·승진 격차가 완화되고 근무 환경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출판 실적이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과 승진 등 학술적 경력 평가에 활용되는 만큼, 성과의 양뿐 아니라 경력 공백과 연구 여건 등 성과가 창출되는 조건을 함께 고려하는 평가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유연근무와 가족돌봄 지원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 나아가 성별 대표성 지표를 넘어 경력 단계, 고용 형태, 장애 여부 등 다양한 조건이 교차하며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분석하는 교차성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 연구자 집단 내에서도 경력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과 기회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활용해 격차가 집중되는 지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스웨덴 Sweden

성별에 따른 스웨덴 유권자들의 정책적 관심 차이

윤선우 | 옥스퍼드대학교(University of Oxford) 사회정책학 박사과정

스웨덴에서는 2026년 9월 13일 총선이 실시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번 스웨덴 총선 관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권자들의 주요 정책 관심사를 살펴보고, 성별에 따른 차이와 그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2026년 스웨덴 유권자들이 정당을 선택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정책 분야는 보건 및 의료, 교육, 경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영역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공영방송 SVT, 예테보리대학교, 왕립 공과대학교가 1991년부터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출구조사(SVT/VALU 2026)에 따르면, 스웨덴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정책 의제는 보건 및 의료(53%), 학교 및 교육(51%), 스웨덴 경제(48%), 치안(47%), 성평등(43%), 노인돌봄(40%), 개인 및 가계 경제(39%), 난민 및 이민(3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 및 의료와 학교 및 교육 영역은 2022년 대비 각각 1%p 하락하고 1%p 상승했으나, 2026년에도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며 스웨덴 유권자들이 지속적으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책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 외에도 스웨덴 경제는 2022년 44%에서 2026년 4%p 상승한 48%를 기록하며 주요 정책 의제 중 3위를 차지하였고, 성평등은 42%에서 43%, 노인돌봄은 41%에서 40%로 큰 변화 없이 주요 관심사로 유지되었다. 이처럼 2022년에 비해 관심도가 높은 정책 의제에 소폭의 변화가 나타났으나, 유권자들의 관심은 공공서비스를 비롯해 경제, 치안, 성평등, 돌봄 등 일상생활 영역 전반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의제에 부여하는 중요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먼저 남성 유권자들의 상위 5개 정책 우선순위는 스웨덴 경제(50.7%), 법과 질서(50.5%), 보건 및 의료(45%), 학교 및 교육(42.1%), 에너지 및 원자력(40.4%)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성 유권자들의 경우 보건 및 의료(61.5%), 학교 및 교육(59.7%), 성평등(54.1%), 노인돌봄(46.3%), 스웨덴 경제(45.3%) 순으로 정책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책 의제 중 성평등은 여성 유권자에게 3위, 남성 유권자에게 13위를 차지하였다.

스웨덴 성평등청(Jämställdhetsmyndigheten)은 여성과 남성이 정치적 사안을 상당히 다르게 판단한다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보면서, 이러한 차이의 배경에 다양한 요인들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예컨대 현재까지는 교육 수준의 차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차이, 돌봄 책임의 불균등한 분담 등이 가능한 설명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부에서는 소셜미디어가 이러한 성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유일한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스웨덴 성평등청은 동시에 여성과 남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의제가 선거 국면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만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와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단순히 누가 정치적 대표직을 차지하는가의 문제 이상으로, 어떤 집단의 경험과 어떤 정책 의제가 실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되고 영향력을 미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참고자료

- Ekengren Oscarsson, Henrik (2026.9.16.), "SVT/VALU 2026: Eftervalsanalys SNS 16 september 2026", Valforskningsprogrammet, Göteborgs universitet, https://cms-production.sns.se/app/uploads/2026/05/Henrik-Ekengren-Oscarsson-presentation.pdf (접속일: 2026.10.28.)
- Jämställdhetsmyndigheten (2026.10.8., 2026.10.9. 수정), "Fortsatt könsgap i politik och representation", https://jamstalldhetsmyndigheten.se/aktuellt/nyheter/fortsatt-konsgap-i-politik-och-representation/ (접속일: 2026.10.28.)
- SVT Nyheter (2026.9.13., 2026.9.14. 수정), "Väljarnas viktigaste frågor", https://www.svt.se/nyheter/valjarnas-viktigaste-fragor (접속일: 2026.10.27.)

- 이러한 조사 결과는 여성과 남성 유권자 간의 표심 차이를 중심으로 정치적 성별 격차를 살펴보는 논의 이상으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여건과 생활 경험에서의 성별 격차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유권자들의 전반적인 관심도가 높게 나타난 상위 6개 정책 영역(보건 및 의료, 학교 및 교육, 스웨덴 경제, 법과 질서, 성평등, 노인돌봄)과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난 영역(보건 및 의료, 학교 및 교육, 노인돌봄, 에너지 및 원자력)에서의 구조적 차이 – 고용 형태, 돌봄 책임, 공공서비스 이용 경험 등 – 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호주 Australia

이민정책 변화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조혜인 | 모나시대학교 Global Studies 조교수·서울대학교 여성연구원 객원연구원

전 세계적으로 반이민 정책이 확산되는 가운데, 호주에서도 토니 버크(Tony Burke) 이민부 장관이 2026년 9월 이민 제도 변경안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이번 변경안이 여성에게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번 변경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배우자 비자 신청비 인상이다. 신청비는 11,710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다. 또한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한 사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구금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그러나 경제적 부담뿐 아니라 자신의 비자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폭력과 통제에 노출된 이주 여성이 단속 강화로 인해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문화 사회인 호주에서 임시비자를 소지한 여성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비해 체류 자격이 불안정해, 폭력을 경험하더라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호주에 계속 머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멜버른 대학교 범죄학과 마리 시그레이브(Marie Segrave)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주·난민 여성 세 명 중 한 명이 가정폭력(데이트 폭력 포함)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비자 소지자는 폭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특히 비자 상태와 관련된 통제와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컸다.

가해자가 이민 제도를 악용해 피해 여성을 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방식도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현재 호주 이민정책에는 배우자 비자 소지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할 경우 영주권 취득 경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Family violence provisions)이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모두가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닌 여성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학생비자로 호주에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왔다가 현지에서 만난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도 있다. 인도주의 비자(humanitarian visas)를 신청하고 호주에 입국한 여성은 가해자가 보호비자(protection visa)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해 폭력을 신고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배우자 비자와 영주권 취득을 약속받았지만, 우선 방문비자로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 가해자는 영주권 취득 약속을 이용해 여성을 통제하거나 이민당국에 신고해 여성을 추방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한다. 당국이나 수사기관이 가해자 자신의 편을 들 것이라고 협박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부 가해자가 언어나 이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여성을 상대로 실제 비자 상태를 속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여성은 자신이 배우자 비자를 소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나 지원을 받기 어렵고, 호주에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한된다.

참고자료

- Australian Multicultural Women's Alliance. (2026), Blueprint for reform: Securing safety for victims/survivors of domestic and family violence on temporary visas. https://amwa.net.au/policies/blueprint-reform-securing-safety-victims-survivors-domestic-family-violence-temporary-visas/ (접속일: 2026.10.8.)
- Segrave, M. (2026), "How the government's new immigration policy will cause more trauma for victim-survivors of domestic violence." The Conversation. https://theconversation.com/how-the-governments-new-immigration-policy-will-cause-more-trauma-for-victim-survivors-of-domestic-violence-292352 (접속일: 2026.10.9.)
- Women's Legal Services Australia. (2026), "Statement in response to the Australian Government's immigration reform announcement." WLSA. https://wlsa.org.au/statement-in-response-to-the-australian-governments-immigration-reform/ (접속일: 2026.10.9.)

- 자신이 이미 비자 체류기간을 초과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여성도 많다. 모나시 대학교 연구팀은 임시비자를 소지했거나 이민 관련 통제 행위를 경험했다고 밝힌 여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소지한 비자와 그에 따른 권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자신이 어떤 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권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2%에 불과했다.

- 여성이 비자 관련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단속 강화가 가해자에게 여성을 위협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 그 결과, 더 많은 여성이 폭력을 신고하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에 계속 머물 수 있다.

- 임시비자를 소지한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대변하는 전국 단체인 The National Advocacy Group on Women on Temporary Visas Experiencing Violence는 2026년 7월 세 번째 개혁 청사진 (Blueprint for Reform 2026)을 발표했다. 이 문서는 현행 이민 제도를 개선해 가정폭력을 경험하는 모든 임시비자 소지 여성이 호주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번 이민 제도 변경안에는 이러한 권고안과 피해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시그레이브 교수는 정부가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 생존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민 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시급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번 이민정책의 변화는 이주와 가정폭력의 관계에 관해 이미 알려진 사실을 정책에 반영하고, 모든 피해 생존자를 위한 안전망을 마련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한지 보여준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비자 관련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